

#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본격 실현을 위한 선제적인 2027년 예산안 편성 작업 착수

- 국정 이념과 부합한 예산안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
- 지출구조조정의 기준 마련 및 의무지출·다부처 협업과제 등 과감하게 검토
- 아젠다 및 신규사업 발굴, 지출구조조정 과정에 일반국민·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 그간 6~8월에 집중된 프로세스 탈피, 예산 편성 조기 착수로 전략적 재원배분

기획예산처는 1.8일(목) 14:00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아젠다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선제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 참석 :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주재), 재경부·과기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금융위 등 20개 부처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하여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발굴~구체화~반영까지 예산 편성 과정을 선정한 아젠다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핵심 아젠다는 지난 12월 진행된 ①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했던 지시 사항 및 논의 사항, ②정부 출범 2년 차로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③저출생·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감안하여 1월 중 발굴할 예정이다.

\* ①AI 등 산업경쟁력 저조, ②저출생·고령화, ③탄소전환 지연, ④양극화 심화, ⑤지역소멸

선정된 아젠다 구체화를 위해 부처-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여 3월말 배포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서 중기관점의 지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지출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단년도 중심으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효율화 TF 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출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객관성·일관성이 미흡했던 지출구조조정의 정의·유형·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지침 배포로 대외 설명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국민제안도 적극 반영하는 등 민간의 정부예산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주권 예산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임 직무대행은 “'27년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모든 부처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27년 예산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예산실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4-2330)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msgukorea@korea.kr)

